

노동정책연구  
2008. 제8권 제4호 pp.119~146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 소득 구성요소와 직업의 소득불평등 효과: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를 중심으로\*

이성균\*\*

이 논문은 경제위기 이후 가구단위의 소득격차를 가구원 직업구성과 관련하여 분석하였다. 경제위기이후 가구소득격차는 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배우자 근로소득 등에 의해서도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가구소득격차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가구주 직업으로서 경영전문직을 한편으로, 단순노무직을 다른 한편으로 직업구조상의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더구나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이 동질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가구주 개인보다는 가구단위를 기준으로 할 때 소득격차가 더 높았다. 가구주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인 가구, 배우자가 미취업자이거나 저임금 직종인 가구의 소득은 계속 낮아지며, 이들과 경영전문직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가구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구단위에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 가구주와 배우자 등 가구원들이 저소득 직종을 벗어나 취업한다면, 가구총소득이 증가하여 저소득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원의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며, 가구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만한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인적자원개발을 지원하고 취업여성을 위한 지원정책도 중요하다.

핵심용어: 가구소득불평등,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 가구주 근로소득, 부부의 직업적 동질성

논문접수일: 2008년 9월 16일, 심사의뢰일: 2008년 10월 7일, 심사완료일: 2008년 12월 22일

\* 이 논문은 울산대학교의 교내연구비(과제번호: 2006-005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초고를 읽고 세심한 지적을 해준 두 분의 논평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 울산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skleeuou@chol.com)

## I. 서론

한국의 소득불평등이 경제위기 이전보다 이후에 더욱 확대되었다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경제위기를 계기로 취업난과 고용불안정이 지속되면서 저소득계층이 확대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임금뿐만 아니라 주식·부동산의 가치 상승으로 소득수준이 더 높아진 계층도 존재한다(김영미·한준, 2007; 한국노동연구원, 2007; 최희갑, 2002). 또한 고소득 집단과 저소득 집단의 가계수지도 대조적이다. 고소득층은 가처분소득보다 지출액이 적어 가계수지상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저소득층은 소비지출 규모가 고소득층에 비하여 1/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소득 자체가 매우 낮아서 가계적자 폭도 확대되었다(통계청, 2008;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2005).

학자들은 최근의 소득격차 문제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노동시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개인 차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기업규모·성·직업·산업·계급·종사상지위별 소득격차를 비교하였고(정이환, 2006; Shin, 2004), 특히 최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다수 발표되었다(전병유·신동균·신관호·이성균·남기곤, 2006; 정진호·최강식, 2000). 이들은 취업자 개인의 경제적 보상과 노동시장 지위의 연관성을 분석하고, 최근의 소득불평등이 노동시장 지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하였다.

소득격차를 연구하는 또 다른 경향은 가구단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가구주의 소득이 하락하고 실업문제가 발생하자, 배우자들이 취업하고 추가적인 가구소득을 확보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가구총소득을 기준으로 소득격차를 분석하였고(반정호, 2008; 이병희·강신욱 외, 2007;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이정우·이성립, 2001), 일부 학자들은 배우자의 취업활동과 근로소득을 소득집단별로 비교하였다(김영미·신광영, 2008; 정의철·김진욱, 2007; 남상섭·신범철·안병룡, 2005; 이성립, 2005). 이러한 연구는 소득에 대한 연구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원래 가구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 다

양한 소득구성 요소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연구들은 “전체 가구소득에서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가구소득불평등이 주로 가구주 근로소득격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현실을 잘 나타낸다. 또한 가구소득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는 가구원의 경제적 생활상태의 불평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가구원들은 취업상태와 무관하게 가구소득을 공유하기 때문에, 가구총소득을 연구하는 작업은 가구단위의 경제적 생활상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가구단위의 연구에서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점은 가구원 직업구성과 가구소득불평등의 연관성이다. “가구주의 근로소득격차를 낚는 직업은 무엇이며, 배우자가 취업할 경우 배우자의 직업 및 근로소득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기존 연구들은 가구주의 학력이나 연령집단별로 가구소득불평등 요인을 분석하지만(정의철·김진욱, 2007; 여유진 외, 2005; 정진호·황덕순·이병희·최강식, 2002), 노동시장 지위를 나타내는 직업 등에 대한 구분이 없다. 직업집단을 구분한 반정호의 연구(2008)는 근로소득 혹은 시장소득을 비교하였으나, 직업 구분에서는 사무직 등 일부 직종에 국한된다. 지지하다시피, 노동의 분화와 소득분배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지표는 직업이기 때문에, 개인의 물질적 보상수준도 이러한 직업적 질서(occupational order)에 영향을 받는다(Reid, 1981). 가구소득이 주로 가구주 근로소득에 의하여 결정된다면, 가구주 근로소득은 가구주의 직업 등 노동시장 지위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이후 배우자의 취업률이 증가하고 이들의 추가소득이 발생한다면, 배우자의 직업과 소득의 연관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의 취업이나 직업활동이 가구주의 직업과 무관하지 않다면,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구성, 그리고 이러한 노동시장 지위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정책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소득양극화 추세에 직면하여 소득보장정책과 일자리제공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취업지원, 직업훈련, 일자리공급, 취업알선정책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일자리제공정책은 직업을 기준으로 실행되어 왔다. 따라서 가구단위 취업자들의 직업구성과 소득격차의 연관성을 분석한다

면, 가구소득격차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이론적으로 파악하고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정책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가구소득격차가 발생하는 요인을 소득구성 항목별로 찾아보고, 부부의 직업구성과 가구소득의 연관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가구소득의 구성요소가 가구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찾아본다. 가구소득은 일반적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 배우자 등 가구원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재산소득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각각의 소득 항목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둘째,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을 중심으로 가구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시장 요인을 분석한다. 노동시장에서의 소득을 결정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구성을 살펴보고 가구단위 직업구성과 소득격차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도시지역 임금소득자 가구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대기업 소유주, 농어민, 자영업자들을 분석에 포함해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이들의 소득을 소득구성 항목별로 자세히 조사한 자료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본의 선택 과정이나 응답의 신뢰도 문제로 인하여 이들의 소득을 일관성 있게 조사한 자료는 거의 없으며, 이들의 소득을 조사한 일부 자료의 경우에도 표본이 작기 때문에 분석 결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근로소득을 갖는 직업인으로서의 기업경영진과 기타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임금소득이 없는 자산 소유자는 분석에서 제외된다.

## Ⅱ. 이론적 시각

### 1. 소득과 직업의 연관성

소득, 가족, 교육, 건강 등 경제·사회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많지만, 학자들이 불평등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경

험적 지표는 직업이다. 직업은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의 사회적·기술적 유형”으로서, “경제적 보상이나 사회적 명예와 같은 반대급부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의미한다(유홍준, 2000: 6). 따라서 많은 학자들은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보상수준이 직업별로 어떻게 상이한가 분석하였으며, 일부 학자들은 “직업에 따른 계급 척도(occupational class scales)”를 마련하고 소득수준을 파악하였다(Crompton, 1995: 78).

그러나 직업의 경제적 보상은 제도나 환경 등에 따라서 변화한다. 직업 자체는 경제활동의 기술적 분업구조에서의 위치를 지칭하므로, 특정한 직업이 다른 직업보다 ‘선협적으로’ 높은 경제적 보상과 사회적 명예를 갖는다고 전제하기 어렵다. 특정 직업의 소득수준은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의 특성이나 사회제도적 맥락에 따라서 다양하고, 시기적으로도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 등에 따라서 변화한다.

현재 직업과 소득의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봉급생활자로 불리는 임금소득집단의 내적 다양성이다. 주지하다시피, 자본주의의 기술적 분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경영관리직과 사무직 등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집단이 양적으로 증가하였고 전문기술을 가진 직업집단도 내적으로 분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Goldthorpe, 1987). 특히 최근에는 경제여건이 변화하면서, 각 직업에 대한 수요가 변동하고 직업간 소득격차도 새로운 특징을 나타낸다. 많은 기업은 경영환경의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다양한 생산방식과 고용형태를 도입하였으며, 핵심/비핵심 인력에 대하여 상이한 방식으로 보상하고 있다.<sup>2)</sup> 즉 경영관리직과 전문직 등 핵심 직무종사자에게는 숙련형성을 위한 인적자원개발과 높은 보상체계를, 주변부 미숙련 노동력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직업훈련 기회와 저임금체계를 적용한다(Regini, 2000). 또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는 직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지만 육체적 생산능력에 기초한 단순노무직이나 개인서비스 직종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였다(Webster, 1995; OECD, 2000).

결국 현대사회의 직업간 소득격차는 새로운 특징을 나타낼 것이다. 기업경영

2) 노동유연화와 소득불평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성균(2004)을 참고.

에 핵심적인 경영관리직이나 전문직에 대한 수요 증가는 임금프리미엄을 낳지만, 주변부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직 등에 대한 수요 감소는 이들의 저임금화를 낳는다(Castells, 2000). 따라서 현대 자본주의의 기술적 변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업집단인 경영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의 소득격차는 과거보다 더욱 확대될 것이다.

## 2. 가구단위 소득과 직업구성의 연관성

소득격차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새롭게 부각된 것은 가구단위 총소득의 차이이다. 앞에서 설명한 소득과 직업에 대한 논의는 주로 취업자 개인을 단위로 한 것이지만, 최근 들어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면서 부부의 경제활동과 가구총소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1인 소득자 가구에서는 가구주 개인의 소득격차가 가구소득격차를 설명하지만, 맞벌이가구에서는 가구주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총소득이 가구소득격차를 설명한다. 또한 전자의 경우에는 가구주 1인의 소득과 직업의 연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부부의 소득과 직업구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가구원 직업구성을 연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맞벌이부부의 증가이다. 1985~96년의 유럽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예로 들면(OECD, 1998), 유럽연합의 1인 근로소득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로서 10년 전에 비하여 6.1% 감소하였다. 반면 2인 이상 근로소득자 가구의 비율은 동 기간에 5.6% 증가한 53.7%에 이른다. 가구구성원의 취업상태를 기준으로 할 때, 1인 근로소득자 가구는 감소하고 2인 이상 근로소득자 가구와 미취업자 가구가 증가하는 “가구원 취업구조의 양극화 현상(polarization)”이 확대되고 있다(OECD, 1998: 21).

한국의 경우에도 성차별적 고용금지제도 도입, 경제활동참여 의식의 변화 등으로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지고 맞벌이부부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가구주의 소득 감소에 대응하여 배우자와 다른 가구구성원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거나 노동시간을 확대함으로써 가구소득을 보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김영미·신광영, 2008; 이성림, 2005; 강이수, 2001). 따라서 가구주 1인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구는 줄어들고 2인 이상의 소득을 가구원들이 공유하는 가

구가 증가하는 것이 현재 한국 사회의 가구경제활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구구성의 변화는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미친다. 가구주 1인의 소득 액수도 중요하지만,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하는 배우자의 존재, 그리고 이들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서 가구소득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배우자의 취업상태와 소득수준은 개인단위의 소득격차를 완화시킬 수도 있고 더욱 강화시킬 수도 있다.<sup>3)</sup> 배우자의 경제활동이 주로 저소득층에서 이루어진 국가에서는 전체적인 가구소득격차를 완화시키지만(Danziger, 2002), 배우자의 취업이 저소득층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서 확대된 경우에는 가구소득격차가 더욱 증가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그러나 부부의 취업 가능성이나 직업적 구성은 우연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없다. 결혼 자체가 사회적 지위 등과 직접 관련되고 가계의 문화적 정체성을 나타내므로, 배우자 개인의 취업 가능성, 취업시 직업 및 소득수준은 가구주의 경제적 상태 등과 밀접히 관련될 것이다. 전문직의 배우자가 단순노무직에 취업할 가능성보다는 전문직이거나 미취업 주부일 가능성이 높고, 생산직 종사자의 배우자가 의사와 같은 특정 직업군에 종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sup>4)</sup>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보자면, 고소득 직업인은 자신의 직업적 지위와 소득수준에 걸맞는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소득 직업인도 비슷한 인적자본이나 경력의 직업 종사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이 계급적 성격을 갖는다는 학자들의 주장은 이러한 부부의 직업적 동질성을 잘 나타낸다(Wright, 1997; Crompton, 1995).

따라서 배우자와 가구주의 직업이 동질화되는 경향이 있다면, 맞벌이부부의 증가 혹은 배우자의 추가 소득이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맞벌이가구가 저소득 직업보다는 고소득 직업에서 더 많고 이러한 부부의 직업**

3)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가구소득불평등의 연관성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미·신광영(2008)을 참고.

4) 배우자 직업선호도에 대한 발표는 이러한 직업적 동질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한 결혼 정보 회사의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의 미혼자들은 결혼 후 맞벌이부부를 희망하며, 남성이 희망하는 배우자 직업은 판사, 한의사, 의사, 4~5급 관리공무원, 변리사, 법무관, 공기업 연구개발직(박사)의 순서이며, 여성이 희망하는 배우자의 직업도 치과의사, 약사, 한의사, 전문의사, 고위공무원, 판사, 공기업 임원, 변리사 등이다(www.jobkorea.co.kr).

별 동질성이 존재할 경우에, 맞벌이부부의 증가는 고소득 가구의 추가소득을 증가시켜 저소득 가구와의 소득격차를 확대할 것이다.

### Ⅲ. 연구 방법 및 자료

#### 1. 실증연구 방법

이 연구는 가구소득격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첫째, 일반적으로 가구주 직업이나 학력 등 명목변수(categorical variables)를 활용하여 소득불평등 요인을 분해할 경우에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집단내(within) 불평등과 집단간(between) 불평등을 구분하는 분산분석이다. 이 연구에서도 소득구성 항목과 직업집단의 불평등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분산분석의 논리(decompositions of inequality)에 기초한 Shorrocks의 소득불평등 분해방법(decompositions of inequality)을 활용한다. 그는 “총소득의 격차가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등 각 소득 항목의 차이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되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값을 활용하였다(Shorrocks, 1982). 즉 가구총소득( $Y^k$ )은 가구주 및 배우자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등 각 소득항목( $Y^k$ )들의 합계이므로, 총소득의 격차는 i) 근로소득 등 개별소득항목 자체의 분산값과 ii) 개별소득항목과 전체 소득의 연관성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sigma^2(Y) = \sum \sigma^2(Y^k) + \sum \rho_{jk} \cdot \sigma(Y^j) \sigma(Y^k) \quad (1)$$

$\rho_{jk}$ 는  $Y^j$ 와  $Y^k$ 의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

또한 식 (1)에서 개별소득항목( $Y^k$ )의 차이가 총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S^*_k(\sigma^2) = \sigma^2(Y^k) + \sum \rho_{jk} \cdot \sigma(Y^j) \sigma(Y^k)$ , 이러한 개별소득항목( $Y^k$ )이 총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정도(proportional contributions)는  $S^*_k(\sigma^2) / \sigma^2(Y)$ 에 의하여 파악된다.

이러한 통계방법을 활용하여 유럽 국가들의 소득불평등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가구소득격차는 주로 근로소득에 의하여 설명된다. 벨기에의 소득불평등

가운데 81.1%는 근로소득격차에 의하여 설명되었으며, 이러한 근로소득의 설명력은 캐나다(89.9%), 핀란드(78.8%), 이탈리아(72.1%)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sup>5)</sup> 또한 일본의 경우에도 1998년에 가구단위의 근로소득의 격차가 전체 가구소득격차의 76%를 설명하였다(Toshiaki, 2005).

따라서 소득 구성요소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직업과 같은 노동시장 지위가 근로소득격차, 더 나아가 가구소득격차를 어느 정도 설명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소득격차가 노동시장에서의 특정한 직업집단 내부의 개인별 소득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가, 아니면 직업집단 간의 차이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인가”를 분리해서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의문은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규명된다.

$$\alpha_i^2 = \sum s_{it} \cdot \alpha_{it}^2 + \sum s_{it} \cdot (W_{it} - W_t)^2 \quad (2)$$

(2)에서  $s_{it}$ 는 t시점에서 i집단이 전체 구성원에서 차지하는 비중,  $\alpha_{it}$ 는 t시점에서 i집단의 분산값,  $(W_{it} - W_t)^2$ 는 t시점에서 집단별 평균소득(W)의 분산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해당 집단의 비중( $s_{it}$ )을 고려하기 때문에, 각 집단의 소득액 수 자체뿐만 아니라 집단의 규모가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설명한다. 예를 들어서 특정 직업의 소득이 평균소득보다 높거나 낮더라도 이 집단 구성원의 비중이 매우 낮다면, 이 집단의 상대적 고(저) 소득이 전체적인 소득격차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회귀분석을 실시하고, 가구주의 직업이 개인적 특성과 학력의 소득효과를 통제한 경우에 가구소득에 미치는 순효과(net effect)를 분석한다. 앞에서 설명한 분산분석이 소득불평등에 대한 직업간 차이와 직업내 차이의 상대적 설명력을 보여준다면, 회귀분석은 각 시기별로 소득을 결정하는 다양한 요인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특히 다중회귀분석은 가구주와 배우자 직업의 소득에 대한 순효과를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인적자본이나

5) 이 수치는 1990년대 중반기 각 국가의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한 근로소득의 설명력이므로 소득 자체를 기준으로 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해석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로소득의 설명력이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7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다는 점은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설명은 Oxley, Burniaux, Dang and d'Ercole(1997)과 Forster and Pearson(2002)을 참고할 것.

특성 등이 동일한 경우에 개인의 직업 자체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다. 더구나 회귀분석은 직업 이외의 변수(예: 종사상 지위, 학력, 연령 등)의 소득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분산분석 결과의 ‘직업내’ 차이 부문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자 료

이 연구는 가구단위 소득자료를 기초로 한다. 경제위기 이후 가구소득을 조사한 자료는 일부 존재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소득을 일관된 항목으로 조사한 자료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조사’이다. 이 자료는 전국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가구주와 배우자들의 직업 활동에 관한 사항, 가구구성에 관한 사항, 주거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였으며, 확률비례추출방법(PPS)에 의해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여기에서 가구소득은 가구당 월평균 금액이며, 가구주 개인의 소득, 가구원의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 연구는 배우자와 가구주의 직업을 6개 집단(경영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기능직, 단순노무직)으로 구분하며, 배우자의 직업구분에서는 위의 6개 집단에 미취업자를 포함한 7개 집단으로 구분한다. 이 자료가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주는 대부분 취업자이다. 그러나 배우자는 취업자와 미취업자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직업구분에서는 ‘미취업자’ 범주를 추가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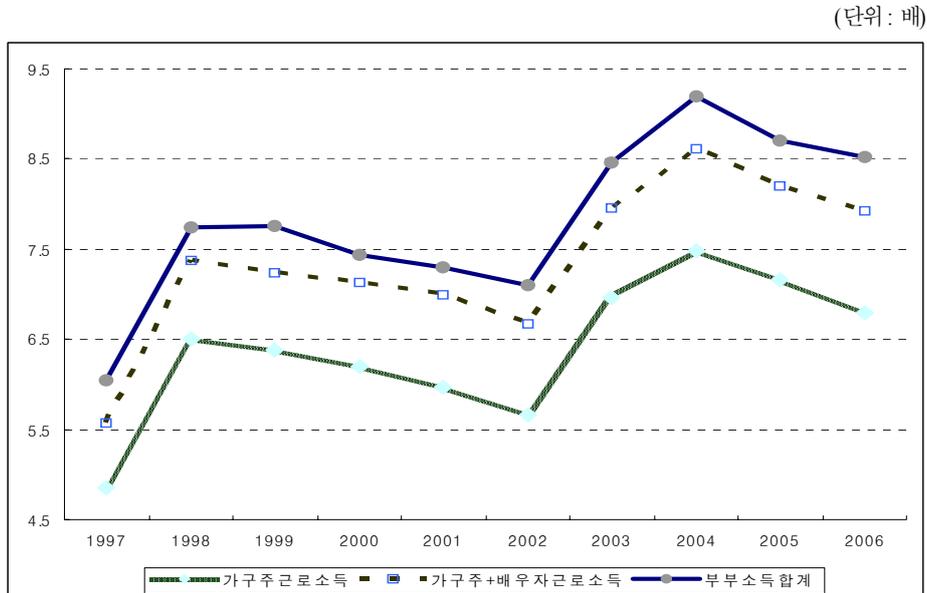
이 자료 가운데 실증분석에 활용한 것은 임금소득자를 가구주로 둔 2인 이상 가구이다. 경제위기 이후 10년간의 소득격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기준의 가구소득을 분석해야 하는데, ‘(전국)도시가계조사’는 2002년 전에는 2인 이상 가구를, 이후(2006년 자료)에는 1인 이상 가구를 조사하였다. 따라서 두시기의 소득수준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 도시가구 가운데 2인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응답자는 1998년 자료 37,175가구, 2006년 자료 43,529가구이다.

## IV. 한국의 가구소득격차 : 예비적 고찰

### 1. 10분위 집단 및 소득구성항목별 격차

소득분포상의 10분위 집단간 가구소득격차는 경제위기 전보다 이후에 더 확대되었고, 특히 최상위 소득집단과 최하위 소득집단의 차이도 예전에 비하여 더 높은 수준이다. 비록 시기별로 두 집단 간 소득격차가 줄어든 경우도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소득격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서 가구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최상위 집단의 가구주 근로소득은 1997년에 최하위 소득집단의 4.8배이었으나 1998년에는 6.5배, 2006년에는 6.8배로 높아졌다(그림 1 참고).

[그림 1] 소득구성항목별 최고 소득계층(상위 10%)과 최저 소득계층(하위 10%)의 비율



자료: 통계청(KOSIS).

또한 가구소득격차는 가구주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는 배우자 소득을 포함한 경우에 더욱 확대되었다. 1998년에 두 집단의 가구주 근로소득은 6.5배이었으나, 이 시기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합계는 7.4배로 증가하였다. 2006년에도 최상위 집단과 최하위 집단의 가구주 근로소득 격차가 6.8배인 데 반하여,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 합계는 7.9배에 이른다. 이것은 가구주 근로소득이 높은 집단에서 배우자 추가 소득이 더 많이 발생하였음을 시사한다.

## 2. 가구주 직업별 가구소득격차

가구소득격차는 가구주 직업별로도 명확하다. 가구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가구주 직업으로서) 생산직은 경영전문직의 1/2, 단순노무직의 소득은 1/3에 불과하다. 중산층을 구성하는 준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차이도 주목된다. 준전문직 가구의 근로소득, 배우자소득, 가구총소득의 증가폭은 사무직이나 판매서비스직보다 훨씬 높다. 또한 이러한 직업별 차이는 배우자의 소득을 기

〈표 1〉 가구주 직업별 가구소득격차 : 소득항목별 비교

(단위 : %)

가구주 직업	구성비		가구주 근로소득		배우자	가구주 총소득		합계
	1998	2006	1998	2006	1998	2006	1998	2006
- 경영전문직	10.5	10.7	162.0	152.0	169.6	152.7	162.9	152.0
- 준전문직	14.2	11.8	121.4	129.7	114.8	137.6	120.3	131.1
- 사무직	16.3	17.8	107.2	120.4	122.4	112.3	112.3	118.9
- 판매서비스직	8.6	11.1	80.9	75.1	60.3	76.9	78.9	75.5
- 생산직	38.7	34.6	88.2	92.3	81.0	90.4	87.3	92.0
- 단순노무직	11.6	13.9	56.0	46.9	78.9	54.8	59.1	48.3
직업간 격차								
- 경영전문-생산	-	-	54.4	60.8	47.8	59.6	53.6	60.5
- 경영전문-노무	-	-	<b>34.6</b>	<b>30.9</b>	<b>46.5</b>	<b>36.1</b>	36.3	31.8
- 준전문-판매	-	-	66.7	57.9	52.6	55.9	65.6	57.6

주: 구성비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각 직업의 비중(%)을, 소득의 수치는 해당 연도의 항목별 평균소득을 기준(=100)으로 할 때 각 직업의 상대적 소득비율을 의미한다. 또한 직업간 격차는 경영전문직(혹은 준전문직)을 100으로 할 경우에 각 직업집단의 상대적 소득비율을 의미함.

준으로 할 경우에도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2006년의 경우에 가구주가 경영 전문직인 가구의 배우자 소득은 배우자 평균소득의 1.5배이며, 단순노무직 가구의 배우자 소득은 50%에 불과하다.

가구주 직업을 기준으로 한 소득격차에서 더욱 흥미로운 것은 1998년과 2006년의 직업별 상대적 소득 비율이다. 가구주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경영전문직과 생산직, 그리고 준전문직과 판매서비스직의 차이는 2006년 들어서 감소되었으나, 경영전문직과 단순노무직의 차이는 오히려 확대되었다. 배우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도, 경영전문직과 생산직과의 차이는 매우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노무직과의 차이는 더욱 확대되었다.

일반적으로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이 저소득 직종을 구성한다고 가정하면, 저소득 직종 가운데 단순노무직의 상대적 소득 하락이 소득격차를 더욱 주도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단순노무직 가구의 가구주 소득 자체도 상대적으로 하락하였고, 이러한 가구의 배우자 소득도 다른 직업 집단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

### 3. 가구단위 직업구성과 가구소득격차의 현황

이러한 결과는 가구주의 직업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취업 가능성 혹은 부부의 직업별 구성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배우자의 취업률은 1998년보다 2006년에 약간 더 높아져, 맞벌이부부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가구주가 취업한 경우에 배우자의 취업률은 28.5%에서 34.8%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구주가 생산직인 경우에는 배우자 취업률이 10% 이상 증가하였다. 배우자 취업률 증가 경향은 경영전문직, 준전문직, 사무직 등 대부분의 직업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배우자 취업률이 낮아진 유일한 경우는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인 가구이다. 단순노무직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에, 경제위기 이후에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인 경우에 배우자의 취업활동 및 추가소득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의 취업률이 낮아짐으로써, 가구단위의 추가소득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가구총소득도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앞의 <표 1>에서 단순노무직의 배우자 소득 하락 폭이 가장 크다는 점은 이러한 배우자 취업률 하락과 밀접히 관련된다.

〈표 2〉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구성과 소득격차

(단위 : %)

배우자	경영 전문직	준전 문직	사무직	판매 서비스	생산직	단순 노무직	무직	합계
I. 구성비								
1. 1998년								
1) 전체	2.3	2.6	3.1	8.3	5.9	6.3	71.5	100
2) 가구주-경영전문직	<b>11.9</b>	5.9	2.9	5.4	1.3	2.1	70.6	100
3) 가구주-준전문직	2.6	<b>6.4</b>	5.7	7.4	2.3	3.5	72.1	100
4) 가구주-사무직	3.4	4.0	<b>6.9</b>	7.2	2.9	4.4	71.3	100
5) 가구주-판매서비스	0.8	1.0	2.5	<b>6.3</b>	4.2	4.0	81.1	100
6) 가구주-생산직	0.2	0.7	1.7	10.0	<b>9.1</b>	8.0	70.3	100
7) 가구주-단순노무	0.1	0.6	0.3	9.2	9.2	<b>11.9</b>	68.7	100
2. 2006년								
1) 전체	3.3	3.1	5.4	12.1	4.4	6.5	65.2	100
2) 가구주-경영전문직	<b>12.9</b>	5.3	6.2	7.9	1.2	0.8	65.8	100
3) 가구주-준전문직	7.2	<b>6.9</b>	9.6	8.7	1.9	2.2	63.6	100
4) 가구주-사무직	3.6	4.0	<b>8.7</b>	11.0	2.5	4.3	66.0	100
5) 가구주-판매서비스	2.0	2.6	5.2	<b>8.1</b>	3.2	5.2	73.7	100
6) 가구주-생산직	0.5	1.9	3.8	16.2	<b>8.2</b>	9.5	59.9	100
7) 가구주-단순노무	0.3	0.7	1.0	12.9	3.0	<b>10.8</b>	71.3	100
II. 부부 직업구성과 상대적 소득비율								
1. 1998년								
1) 전체	225.4	157.4	158.4	123.6	105.8	111.8	87.1	100
2) 가구주-경영전문직	253.4	192.6	175.7	192.5	160.3	168.7	142.2	162.8
3) 가구주-단순노무	-	-	90.7	86.7	79.8	<b>72.3</b>	<b>50.2</b>	59.1
2. 2006년								
1) 전체	170.1	134.1	139.9	116.1	104.1	95.9	88.2	100
2) 가구주-경영전문직	241.4	191.2	169.4	167.9	161.9	123.1	129.9	151.9
3) 가구주-단순노무	-	-	114.3	81.0	73.2	<b>69.1</b>	<b>36.9</b>	48.3

주: 상대적 소득 비율은 전체 가구의 소득(=100)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가구소득의 상대적 값을 의미하며, “가구주가 단순노무직, 배우자가 경영전문직”은 사례수가 매우 작아 표에서 생략.

또한 배우자가 취업한 경우에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별 동질성이 강화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가구주가 경영전문직인 가구에서 가장 많은 배우자 직업도 경영전문직이었으며, 판매서비스직 가구주의 배우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직업은 판매서비스직이었다. 또한 직업의 동질성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도, 가구주가

저소득 직종인 경우에 배우자 직업도 저소득 관련 직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고소득층인 경우에는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얻는 직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부부 직업구성은 가구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친다. 첫째, 가구주의 직업이 동일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직업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진다. 가구주가 고소득 직종인 경영전문직의 경우에 ‘배우자-경영관리직’의 소득은 경영전문직 가구 평균소득의 1.5배이며, ‘배우자-무직’인 경우에는 경영전문직 평균소득의 87%에 불과하다. 또한 가구주가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도 ‘배우자-단순노무직’은 단순노무직의 평균적인 가구소득보다 높지만, ‘배우자-무직’인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85%이다.

둘째, 가구소득격차가 가장 큰 집단은 고소득층 동일직업가구와 저소득층 배우자 무직가구이다. 2006년 자료를 보면(표 2), “가구주-경영전문직, 배우자-경영전문직”인 가구와 “가구주-단순노무직, 배우자-무직”인 가구의 소득은 당해 연도 평균소득의 231.6% : 37.1%이었다. 더구나 후자의 가구소득이 1998년에 평균가구소득의 50%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저소득 가구의 소득 하락 폭이 가장 크다는 점도 알 수 있다.

결국 가구소득격차는 가구주의 직업에 따라서 달라지며, 배우자의 취업상태 및 직업의 종류 등에 따라서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부부의 직업적 동질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가구소득격차는 가구주의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할 때보다는 배우자의 소득 등을 합할 경우에 더 확대되었다.

## V. 가구소득항목과 직업의 불평등 효과: 분산분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구소득격차가 소득구성항목 및 가구주 등의 직업에 따라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면, 가구소득불평등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득항목의 차이가 가구소득격차를 주도하는가, 그리고 가구주나 배우자의 직업이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가구소득격차를 소득구성항목별로 분해하는 작업과 직업집단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작

업에 의하여 규명될 것이다.

### 1. 소득항목별 설명력

한국의 가구소득격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소득구성항목은 근로소득, 특히 가구주의 근로소득이다(표 3). 가구주의 근로소득은 가구단위의 사업·부업 소득이나 재산소득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소득격차에 영향을 미치며, 배우자 근로소득도 가구주의 근로소득보다는 낮지만 사업·부업소득이나 재산소득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소득격차를 설명한다. 또한 가구주와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전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은 1998년보다 2006년에 더 높다. 가구주의 근로소득 차이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1998년에 55.2%이었으나, 2006년에는 62%로 증가하였고, 배우자 근로소득의 영향력도 13.5%에서 14.9%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대상이 근로소득에 일차적으로 의존하는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라는 점과 밀접히 관련된다. 도시가구의 근로소득은 이 기간에 경상소득의 90%를 차지하였으며, 가구주 근로소득이 경상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75.2%(1998년), 73.0%(2006년)이었다. 또한 배우자 근로소득도 가구총소득의 10%를 차지하기 때문에 가구소득·격차에 두 번째로 높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 총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구주 근로소득

〈표 3〉 소득항목별 구성비와 소득불평등 기여도

(단위: %)

소득항목 구분	소득구성비		소득불평등 기여도		
	1998년	2006년	1998년	2006년	시기별 차이
근로소득	90.7	90.7	76.48	83.11	6.63
- 가구주 근로소득	75.2	73.0	55.22	62.02	6.79
- 배우자 근로소득	9.2	10.8	13.52	14.95	1.43
사업 및 부업소득	4.1	3.6	5.48	8.05	2.57
재산소득	2.2	1.1	4.15	2.67	-1.48

주: 소득구성비는 해당 연도의 경상소득 가운데 각 소득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이며, 소득불평등 기여도는 Shorrocks의 분석방법에 의한 결과. 총소득 구성 항목 가운데 이전소득 등은 표에서 제외함.

의 차이, 그리고 배우자의 추가소득의 차이가 가구총소득의 ‘격차’를 낳는다. 배우자가 취업하고 추가소득이 발생할수록 가구총소득이 확대되는 것은 이러한 소득 구성의 필연적 결과이다.

반면, 재산소득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근로소득보다 낮다. 부동산과 같은 ‘재산’의 가치는 높을 수 있으나, 이러한 재산을 기초로 ‘소득’(임대소득 등)을 얻는 임금소득자의 비중은 매우 낮고 재산 ‘소득’ 액수 자체도 평균적으로도 가구소득의 2%에도 못 미친다. 따라서 재산 자체의 가치는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 있으나, 적어도 도시 임금소득자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격차가 전체적인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다.<sup>6)</sup>

## 2. 가구주 직업간 소득격차의 설명력

가구소득격차가 일차적으로 가구주 근로소득의 격차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가구소득불평등이 가구주의 직업과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실제로 1998년의 가구소득격차를 직업별로 분해하면(표 4를 참고), 가구주 근로소득격차의 20.9%, 가구근로 소득격차의 15.8%, 가구 총소득격차의 14.7%는 가구주의 ‘직업’이라는 단일한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었다. 반면, 근로소득을 제외한 재산소득 등은 가구주의 직업과 밀접히 관련되지 않으며, 가구주의 직업간 차이가 이러한 소득의 격차를 설명하는 정도도 매우 낮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간 차이가 전체 가구소득격차를 설명하는 정도는 1998년보다는 2006년 들어서 더 크다. 예를 들어서 가구주의 직업간 차이는 2006년에 가구주 근로소득격차의 24.7%, 가구원 근로소득의 16.7%, 가구총소득의 14.9%를 설명한다. 또한 사업 및 부업소득 격차에 대한 가구주 직업의 영향력도 1998년보다는 2006년에 더 증가하였다. 따라서 가구주의 직업간 소득격차가 최근 한국 사회의 가구소득불평등과 이러한 불평등의 ‘확대’를 설명하는 요인 가운데 한 가지임을 알 수 있다.

6) 그러나 이 연구가 비임금 자산소유가를 제외하기 때문에, 한국 사회의 재산소득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임금 자산가들을 포함한 또 다른 자료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분석은 서론에서 지적하였듯이 충분한 표본을 포함한 자료가 공개되는 추후 시기의 과제로 남긴다.

〈표 4〉 가구소득격차에 대한 분해(decomposition) 분석 결과

소득구성항목	총분산(A)	직업내 분산(B)	직업간 분산(C)	직업간 분산의 비중(C/A, %)
I. 가구총소득				
1998년	0.39	0.33	0.06	12.88
2006년	0.42	0.35	0.07	14.85
II. 근로소득				
1998년	0.41	0.34	0.07	15.76
2006년	0.52	0.43	0.09	16.69
II-1. 가구주 근로소득				
1998년	0.44	0.35	0.09	20.96
2006년	0.57	0.43	0.14	24.71
II-2. 배우자 근로소득				
1998년	0.55	0.45	0.10	16.86
2006년	0.87	0.80	0.07	9.17
III. 사업·부업소득				
1998년	0.53	0.47	0.06	2.23
2006년	4.40	4.09	0.31	7.07
IV. 재산소득				
1998년	1.69	1.67	0.02	1.29
2006년	3.83	3.79	0.04	1.02

그렇다면 가구주 직업간 근로소득격차는 어떤 직업의 차이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였는가? 분산분석의 논리에 의하면(식 2), 각 직업이 직업간 소득격차에 미친 영향력은 해당 직업의 소득과 취업자 전체의 평균소득의 차이, 그리고 각 직업 종사자들의 비중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따라서 직업의 영향력을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소득이 높고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직업 집단과 “소득이 낮지만 취업자 비중이 높은” 직업 집단을 비교하는 것이다. 앞의 <표 1>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의 경우에 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경영전문직, 후자의 대표적인 사례는 생산직과 단순노무직이다.

분산분석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가구소득격차를 주도하는 것은 단순노무직의 상대적 저소득화라는 사실을 보여준다(표 5). 앞에서 정리한 <표 2>에서 가구주의 직업별 구성비를 기준으로 하면, 생산직의 비중이 단순노무직보다 높기 때문에 이들의 근로소득 변동이 소득격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가구주 근로소득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면, 단순노무직이 생산직

보다 더 낮고 배우자의 취업률 및 근로소득도 훨씬 더 낮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의 소득이 낮아질수록 직업간 가구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된다. 더구나 (가구주의 직업으로서) 생산직이 임금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에 낮아진 데 반하여, 단순노무직의 비중은 동 시기에 증가하였고 이들의 근로소득도 상대적으로 더욱 낮아졌다. 따라서 생산직보다는 단순노무직의 저소득화가 직업간 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며, 이러한 영향의 정도는 1998년보다 2006년에 더 높다.

또한 경영전문직의 고소득화도 가구소득격차를 주도한다. 이 집단의 근로소득은 다른 집단보다도 훨씬 높고 전체 취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도 10% 이상을 유지하였다. 특히 전문직은 전체 취업자의 8.5%(2006년 기준)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직업간 소득격차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비록 이 직업집단의 가구주 근로소득 비중이 2006년 들어서 약간 하락하여(표 5 참고) 가구소득격차에 미치는 영향도 줄었으나, 경영전문직 가구주의 높은 근로소득은 여전히 가구소득격차를 확대하는 요인이다. 또한 평균소득 이상의 소득집단 가운데 준전문직도 일정한 영향을 미친다. 이 집단의 경우에 가구주 근로소득과 배우자 근로소득이 경영전문직 다음으로 높고, 소득비중도 1998년 보다는 2006년 들어서 더욱 높아져 가구주 근로소득격차를 확대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표 5> 직업간 근로소득 격차의 직업별 구성비

직업 구분	가구주 근로소득 기준		배우자 근로소득 기준		부부 근로소득 기준	
	1998년	2006년	1998년	2006년	1998년	2006년
직업간 분산 합계	0.09	0.14	0.10	0.07	0.07	0.09
분산의 직업별 구성비(%)	100	100	100	100	100	100
- 경영전문직	34.9	19.6	45.4	41.2	45.7	27.9
- 준전문직	11.1	10.2	6.1	12.8	11.4	10.6
- 사무직	4.5	9.5	13.1	8.1	4.5	9.7
- 판매서비스직	4.8	6.3	0.5	0.11	4.8	8.9
- 생산직	4.1	0.3	21.2	14.7	10.6	1.9
- 단순노무직	40.3	54.1	13.7	21.2	23.2	41.0

주: 직업간 분산 합계는 <표 4>의 직업간 분산값(C)을 의미하며, 분산의 직업별 구성비는 직업별 평균소득 분산값이 직업간 분산 합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한편, 고소득 직업집단과 저소득 직업집단은 배우자의 근로소득격차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의 <표 4>에서 배우자 근로소득격차의 16.9%가 가구주의 직업간 차이에 의하여 설명된다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이를 직업별로 분해하면 경영전문직과 다른 직업의 차이가 배우자 근로소득격차의 40% 이상을 설명하고 있다(표 5 참고). 또한 단순노무직의 경우에도 배우자 취업률이나 추가 근로소득이 다른 직업집단보다 낮기 때문에, 이들의 저소득화는 배우자의 근로소득격차의 상당 정도를 설명한다.

결국 경영전문직 가구주의 높은 근로소득과 이들의 배우자 추가소득, 그리고 단순노무직 가구주의 근로소득과 이들의 배우자들의 상대적 저소득화가 최근의 가구소득격차를 확대한다. 특히 단순노무직 종사자들은 근속기간이나 임금 수준이 낮고 실업 및 재취업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하기 때문에, 상대적 빈곤의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Ⅵ. 가구단위 직업의 소득불평등 순효과 : 회귀분석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이 가구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업은 성이나 학력과 일정하게 관련되기 때문에, 특정한 직업의 평균소득액수를 비교한다고 해당 직업의 소득불평등(순)효과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귀분석이다. 회귀분석은 직업에 연관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 직업의 순(net)소득효과를 나타내므로, 회귀분석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업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할 수 있다.

1998년과 2006년의 월평균 가구소득(로그값)을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면(표 6), 가구소득은 가구주와 배우자의 인적 특성(성, 연령, 학력 등)과 가구 유형 등에 의하여 결정되며,<sup>7)</sup> 이러한 인적 특성이나 가구 유형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에도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7) 회귀분석 결과는 인적 특성이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보여준다. 예를 들어서,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고졸 이하의 저학력일수록 가구소득이 낮아진다.

〈표 6〉 가구소득 결정요인에 대한 회귀분석

변 수	부부근로소득		가구소득	
	1998년	2006년	1998년	2006년
가구주의 성(여성)	-0.09**	-0.12**	-0.06**	-0.07**
연령	1.12**	1.43**	1.16**	1.26**
연령 <sup>2</sup>	-0.99**	-1.38**	-1.00**	-1.13**
학력(기준=고졸)				
고졸 미만	-0.04**	-0.08**	-0.06**	-0.12**
대학 이상	0.01	0.01*	0.01	0.01*
가구주 직업(기준=사무직)				
- 경영전문직	0.14**	0.06**	0.12**	0.05**
- 준전문직	0.04**	0.03**	0.04**	0.03**
- 판매서비스직	-0.04**	-0.09**	-0.05**	-0.10**
- 생산직	-0.12**	-0.13**	-0.14**	-0.14**
- 단순노무직	-0.17**	-0.22**	-0.17**	-0.20**
가구주 고용(기준=정규직)				
비정규직	-0.18**	-0.20**	-0.17**	-0.18**
배우자의 성(여성)	0.11**	0.12**	0.12**	0.20**
연령	-0.19**	-0.10*	-0.32**	-0.35*
연령 <sup>2</sup>	0.14**	0.04	0.25**	0.23
학력(기준=고졸)				
고졸 미만	-0.001	-0.01	-0.01	-0.01
대학 이상	0.001	-0.001	0.001	-0.001
배우자 직업(기준=사무직)				
- 경영전문직	0.03**	0.03**	0.03**	0.04**
- 준전문직	-0.07**	-0.04**	-0.04**	-0.01**
- 판매서비스직	-0.15**	-0.13**	-0.09**	-0.06**
- 생산직	-0.09**	-0.05**	-0.07**	-0.05**
- 단순노무직	-0.10**	-0.08**	-0.08**	-0.09**
- 무직	-0.30**	-0.27**	-0.27**	-0.26**
통계량, R <sup>2</sup>	0.30	0.38	0.29	0.35

가구주의 직업을 구분한 더미변수(기준범주=사무직)들의 통계적 유의미도와 계수값을 보면, 가구주가 경영전문직인 가구와 단순노무직인 가구에서 소득 격차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연령이나 학력, 성과 같은 다른 요인들의 효과를 통제한 경우에, 경영전문직은 사무직보다 훨씬 높은 근로소득을 나타내며, 이들의 계수값은 준전문직보다도 더 크다. 그러나 가구주가 사무직인 가구와 저소득 직업 종사자 가구의 소득격차도 매우 크다. 판매서비스직, 생산직, 단순노무직

가운데 사무직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직업은 단순노무직이다. 따라서 분산분석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이라는 가구주 직업의 상대적 저소득화가 가구소득불평등을 좀 더 확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직업도 가구주의 직업과 별도로 가구소득이나 근로소득에 영향을 미친다. 기준 범주가 되는 (배우자의 직업으로서) 사무직 가구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은 경영전문직이 유일하다. 또한 배우자가 무직상태인 가구, 판매서비스직이나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가구도 사무직보다 훨씬 낮은 소득수준에 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사항은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정규/비정규직)가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이다.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일반화되면서, 인건비 부담이 적은 임시·일용직, 파트타임, 계약제 형태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직업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인 가구소득이 정규직보다 낮으며, 두 집단의 가구소득격차는 2006년에 들어서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인다. 더구나 이러한 변수의 계수값이 매우 크다는 점을 볼 때, 동일한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비정규직 지위가 소득 하락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결국 회귀분석 결과도 가구주와 배우자 개인의 취업과 직업에 따라서 근로소득격차가 발생하며, 가구원 개인의 직업보다 부부의 직업별 구성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됨을 나타낸다. 특히 가구주 및 배우자의 직업을 기준으로 한다면, 전문직 가구와 단순노무직 가구의 차이가 명확해지며, 특히 단순노무직 가구의 저소득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VII. 결 론

이 연구는 임금소득자를 중심으로 가구소득 항목별 불평등 효과와 직업별 소득격차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경제위기 이후 가구소득격차는 주로 가구주의 근로소득 격차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배우자의 근로소득 등에 의해서도 더욱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가구소득격차는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

자의 직업 및 추가소득과도 밀접히 관련된다. 가구주의 직업을 기준으로 하면, 경영전문직을 한편으로, 단순노무직을 다른 한편으로 직업구조상의 소득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소득불평등 구조에서 가장 주목할 것은 단순노무직 등의 상대적 저소득화이다. 일반적으로 소득격차는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와 저소득층의 소득 하락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가구주의 직업이 단순노무직인 가구, 배우자가 미취업자이거나 저임금 직종인 가구의 소득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이들과 경영전문직과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가구소득격차는 부부의 직업적 동질화에 영향을 받는다.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가구주와 배우자의 직업이 동질화되면서, 개인의 직업 간 소득격차보다 가구별 직업구성에 따른 소득격차가 더욱 높다. 특히 맞벌이 부부만을 보면, 상대적 고소득층인 경영전문직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경영전문직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배우자들의 추가소득도 더욱 높아진다.

부부의 직업적 동질화 경향 그리고 가구단위 소득격차 확대는 현재의 불평등이 경제적 차원의 불평등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뿌리내려진(socially embedded) 불평등을 낳을 것이다(Mogues, Tewodaj and Carter, 2005: 193). 결혼 자체가 당사자들의 가정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 등과 직접 관련되며, 배우자의 취업 가능성, 취업시 직업 및 소득수준은 가구주의 경제적 상태 등과 밀접히 관련된다. 또한 경영전문직 등 고소득직업 종사자 가구원들은 높은 가구소득을 기초로 풍요로운 주거환경과 문화여가생활을 추구하지만, 단순노무직 등 저소득층 가구원들은 근로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가구원의 교육활동과 문화여가활동도 고소득층과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가구단위의 소득이 가구원의 문화자본을 형성하는 경제적 자본으로 기능함으로써(Bourdieu, 1997; 양은경·이상길·장미혜·조은·주형일·홍성민, 2005), 불평등은 장기적으로도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가구단위 근로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일은 좁게는 경제적 불평등을, 더 넓게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본문의 분석 결과는 이러한 소득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동시장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는 저소득 가구원이 많이 취업

한 단순노무직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소득 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본문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단순노무직의 소득 하락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면, 이들이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일자리(decent jobs)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한 저소득 가구원 전체의 취업률, 특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는 일이 필요하다. 가구주의 직업이 저소득층일수록 배우자의 취업률도 낮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저소득 가구의 가구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취업하도록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 가구주가 일시적으로 저소득 직종에 종사하더라도 다른 가구원들이 저소득 직종을 벗어나 취업한다면, 가구원 전체가 생계문제를 해결하고 저소득 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

저소득 가구주와 배우자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노동시장정책은 인적자원개발정책이다. 회귀분석에서 저학력층이나 여성가장 가구의 소득이 낮은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들은 인적자원의 수준이나 직업경력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현재의 노동시장 구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적정한 일자리에서 실제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인적자원을 개발하고 직업훈련과 취업알선을 연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취업을 희망하지만 실제로는 소득에 비하여 높은 보육비 때문에 취업을 포기하는 저소득 가계여성을 위하여 보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일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여성친화적 일자리가 확대되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 보육정책이 발전한다면, 여성배우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가구총소득도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사항은 이 논문이 한국 사회의 소득격차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 논문은 분석 대상자들을 2인 이상 봉급생활자 가구로 한정하기 때문에, 1인 가구 혹은 비임금소득자집단의 소득수준을 생략하며 결과적으로 가구격차의 실체를 과소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독거노인과 같은 단독가구의 소득이 2인 이상 가구보다 낮으며, 자산가집단과 같은 비임금소득자가 임금소득자보다 높은 소득수준에 있다(통계청, 2008). 이러한 문제점은 1인 가구와 비임금소득자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확한 소득조사 자료를 추가적으로 분석할 때 해결될 것이다. 이 과제는 자료가 확보되는 추후의 작업으로 넘긴다.

## 참고문헌

- 강이수. 「변화하는 노동시장과 여성노동자」. 『경제와 사회』 51 (2001): 10~37.
- 김영미·신광영. 「기혼여성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가구소득불평등의 변화」. 『경제와 사회』 77 (2008): 79~106.
- 김영미·한준. 「계급과 불평등: 소득불평등 분해를 통해 본 한국 불평등구조의 변화」. 전기사회학회 발표문, 2007.
- 남상섭·신범철·안병룡. 「경제위기 이후 소득분해와 불평등의 요인분해」. 『창업정보학회』 8 (2) (2005): 159~183.
- 반정호. 「최근 소득분배 현황과 조세 및 공적이전의 재분배효과: 근로자가구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42 (2008. 6): 22~40.
- 양은경·이상길·장미혜·조은·주형일·홍성민. 『문화와 계급: 부르디외와 한국사회지』. 동문선, 2005.
- 여유진·김미곤·김태완·양시현·최현수.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05-11, 2005.
- 유홍준. 『직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2000.
- 이병희·강신욱 외.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 조세의 재분배효과 추이 분석』. 양극화 민생대책위원회, 2007.
- 이성균. 『경제위기와 노동시장변동』. 울산대학교 출판부, 2004.
- 이성림. 「취업 여성배우자의 소득기여도와 소득분배소득계층 이동」. 『소비자학회연구』 16 (4) (2004): 17~34.
- 이정우·이성림. 「한국의 부의 불평등 추계」. 『경제발전연구』 7 (1) (2001): 1~28.
- 전병유·신동균·신관호·이성균·남기곤. 『노동시장 양극화의 경제적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6.
- 정의철·김진욱. 「가구특성별 소득불평등 요인 분해에 관한 연구」. 『사회보

- 장연구』 23 (3) (2007): 57~77.
- 정이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휴머니타스, 2006.
- 정진호 · 황덕순 · 이병희 · 최강식.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 \_\_\_\_\_. · 최강식. 「노동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석」. 『경제학연구』 49 (3) (2000): 39~64.
- 최희갑. 「외환위기와 소득분배의 양극화」. 『한국경제연구』 8 (2) (2002): 1~20.
- 통계청. 「2008년 2/4분기 가계수지동향」. 보도자료, 2008.
- 한국노동연구원. 『KLI 노동통계』. KLI, 2007.
- Bourdieu, Pierre. *La Distinction*. (『구별짓기: 문화와 취향의 사회학』. 새물결). 1997.
- Castells, Manuel. *The Rise of the Network Society*. (김묵한 · 박행웅 · 오은주 역 (2003), 『네트워크사회의 도래』. 한울아카데미). 2000.
- Crompton, Rosemary. *Class and Stratification* (정태환 · 한상근 옮김, 『현대의 계급론』, 한울아카데미). 1995.
- Danziger, Sheldon. H. *Understanding Povert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2.
- Forster, Michael F., and Mark Pearson.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the OECD Area: Trends and Driving Forces*. OECD Economic Studies No.34 (2002): 6~40.
- Goldthorpe, John. *Social Mobility and Class Structure in Modern Britain*. Clarendon Press, 1987.
- Mogues, Tewodaj and Carter, Michael R. "Social Capital and the Reproduction of Economic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Inequality* 3 (2005): 193~219.
- OECD. *Employment Outlook*. OECD, 2000.
- \_\_\_\_\_. *Employment Outlook: Recent Labor Market Developments and Prospects*. OECD, 1998.
- Oxley, Howard, Jean-Marc Burniaux, Thai-Thanh Dang and Marco Mira d'Ercole.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13 OECD Countries*. OECD Economic

Studies No.29 (1997): 5~92.

Regini, Mario. "The Dilemmas of Labor Market Regulations." in Esping-Andersen (ed.) *Why Deregulate Labour Market*.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Reid, I. *Social Class Differences in Britain*. London: Grant McIntyre, 1981.

Shin, Kwang-Yeong. "Class and Income Inequality." *Korea Journal* 44 (1) (2004): 5~21.

Shorrocks, A. F. "Inequality Decomposition By Factor Components." *Econometrica* 50 (1) (1982): 193~212.

Toshiaki, Tachibanaki. *Confronting Income Inequality in Japan*. MA: Cambridge, 2005.

Webster, Frank.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조동기 역(1997), 『정보사회이론』. 서울: 나남출판). 1995.

Wright, Erik Olin. *Class Counts*. MA: Cambridge, 1997.

Effect of Income-composing Factors and Occupations on  
Family Income Inequality after the Economic Crisis :  
Focusing on the Urban Wage-Earners

Sungkyun Lee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s of income-composing factors and occupations on the family income inequality after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By focusing on the urban wage-earners, the paper analyze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income differentials and occupational composition at the family level. The major findings based on the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re as follows. First, family income differentials are higher in the post-crisis period than in the pre-crisis period. The differentials came mainly from the wage gap by the bread-winners. Second, the occupation of the bread-winners at the family level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ome differentials. Whereas family incomes of the managerial or professional occupations get higher, those of the unskilled workers lower. Third,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became higher after adding the income of other family members. While the proportion of dual-earner-family increases, the occupation of the family members tends to be similar each other. Finally, the relatively low family income of the unskilled workers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the income differentials in Korea. These findings suggest several policies for reducing inequality at the family level. One of them is the policy to increase the income of all family members, especially that of wife. If they have decent jobs, their chance of being out of poverty trap would be higher. Public policies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job creations could lead them to get decent jobs.

Keywords : family income inequality, occupational composition, labor income of the bread-winner, occupational similarity.